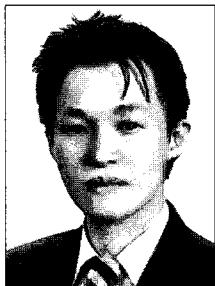


한계와 문턱



배정식
본회 지도부장

구제역 이후를 대하는 농식품부의 수수방관이 심각하다. 농식품부는 국민의 먹거리로 책임지는 기관이다. 구제역 사태로 우유부족 문제가 불거지자 수입 유제품에 대한 무관세 물량을 대폭 늘리는 신속한 대책을 취했다. 그런데 정작 원유수급 안정을 위한 국내대책에는 미온적이다. 구제역 살처분 농가의 재임식을 위한 보상금 체계개선은 난색을 표하고 있고, 최근 몇 년간 계속된 이상 기후와 사료값 인상, 구제역으로 인해 얼마나 목장경영이 악화되고 있는지는 가늠조차 못하는 모양새다.

악몽 같은 공포의 구제역은 잡혔지만,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다. 공포의 확산은 확실한 것에서 불확실한 것으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구제역 매몰 농가들은 정부의 100% 시가보상이란 빛 좋은 허울에 갇혀있다. 과연 이 보상금으로 재기를 할 수는 있는 건지, 젖소를 구할 수나 있는 건지, 잘못된 보상체계가 개선이 가능한 건지... 불확실의 나락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구제역으로 수조원의 돈이 들어가 예산이 바닥났다고 한다. 아니 아직 매몰보상금 조차도 확보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축산국의 일년 예산이 1조원 남짓이니 그럴 법하다. 살처분 농가들은 턱 없이 부족한 보상금으로 반에 반도 목장 재건이 어렵다고 울부짖고 있다. 보상금 지급기준인 농협의 산지가격 조사가 실세를 반영하지 못하는데도 돌아오는 건 100% 시가보상이란 말 뿐이다. 악법도 법이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야 하는 것도 법이다.

구제역이 우유부족 사태를 촉발하긴 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예견은 되었다. 우유생산은 단순히 공산품처럼 공장에서 찍어내듯 생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계속된 폭염, 한파와 사료 값 인상 속에 사료의 질적 저하로 인한 산유량의 감소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터이다. 구제역 백신으로 인한 유량감소, 태아사산, 대사성질병 문제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직 진행 중이다. 이대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계속 목장을 해야 하는지, FTA는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모든 게 불확실의 연속이다.

원유수급 안정대책은 단순히 말이나 수입대책으론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제 구제역 피해보상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 하루 빨리 재입식으로 목장 재건이 될 수 있도록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변경해야 한다. 더불어 정상적인 낙농업 영위가 가능도록 원유가 현실화를 비롯한 생산의욕을 고취 시킬 수 있는 대책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본질은 피한 채 나 몰라라 하거나 겉핥기식 대책은 어차피 한계를 부른다.

걱정스런 농식품부의 현실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일차적으로 농민이지만 결국은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을 바로 보아야 한다. 그땐 또 뭐라 변명할 건지. 마시는 우유를 수입해 해결하겠다고 나올지 모를 일이다. 금번 구제역 사태에서 보듯 한계를 넘으면 견접을 수 없는 사태로 빠지게 된다. 잘못된 제도의 문제를 결국 돈 문제를 이유로 보상체계를 바로 잡지 않고, 물가잡기에 낙농인의 목을 죄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현장의 낙농인들은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매한가지 심정에 놓여있다.

한계에 다다르면 문턱을 넘는 법이다. 쓰나미처럼. ☺

